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정치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정치

- 국가와 관련된 활동
-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된 활동
-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 대통령의 국정 운영
-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2) 넓은 의미의 정치

- 국가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
- 학급 규칙 제정을 둘러싼 친구들 간의 대립
- 한정된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 공공시설의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 대통령의 국정 운영
-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2. 법의 이념

(1) 정의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 법 제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자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상대적·실질적 평등 추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함.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차이를 고려함.

(2) 합목적성

-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
- 복지 국가를 지향하며 공공복지의 내용을 법에 반영하고 있는 것

(3) 법적 안정성

-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 법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법이 쉽게 폐지되거나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함.
- 일반인의 법 의식에 부합해야 함.
-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시효 제도

3.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1) 고대 아테네

- 직접 민주 정치 실시(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 민회(모든 시민이 참여함.), 평의회, 재판소로 운영됨.
- 추첨제나 운번제를 통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음.
- 시민에는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해당함. (노예, 여성, 외국인 X)
-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한계

(2) 근대 사회 (시민 혁명으로 확립됨.)

- 대의 민주제(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
-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등) 확립
- 노동자, 여성 등에게 참정권 부여 X

(3) 현대사회(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

- 보통 선거제 시행, 대의제를 기반으로 함.
- 직접 민주 정치 요소 도입 (국민 투표제·소환제·발안제 등)

(4) 자유의 발전

① 소극적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함.

② 적극적 자유

1) 국가에의 자유

- 국정 참여를 하고자 함. 참정권으로 발전됨.

2) 국가에 의한 자유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자유권으로 발전됨.

4. 사회 계약설 사상가의 견해

(1) 홉스

- 자연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전쟁 상태)
- 계약을 맺어 자연권 포기
- 주권(힘)을 주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자연권 보장
- 개인은 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포기한다고 본다. (X)
Why? 자연권은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보존하는 것이므로

(2) 로크

- 자연상태 : 대체로 평화로우m(but 불편함.)
-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음
→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데 불안함을 느낌
- 통치자에게 자연권 위임, 자연권 보호를 맡김.
- 입법권 우위
- 저항권 인정(국가가 사회 계약 위반 시)

(3) 루소

- 계약 형성 이유 :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함.
- 직접 민주제(누군가에게 넘기기 X, 모두가 참여)
- 일반의지(공공선)을 추구함.(국가를 통해 실현)
- 공화제 (군주X)

5.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1) 법치주의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해야 함.
- 국가 권력의 행사 :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사람(人)의 지배 X, 법의 지배 O

(2) 형식적 법치주의 (초기의 법치주의)

-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 X
-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
- 형식과 절차의 합법성만 중시
→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률의 형식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 삼지 않음.
-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1.9평)
- 합법적 독재의 가능성
- 의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음.

(3)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정당성 확보에 주목.
-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짐.
-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2021.9평)

6. 헌법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헌법의 의의

- 국가의 기본법·근본법
→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
→ 국민의 기본법 보장
- 국가의 최고법
→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
→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 작용 효력 X(법률 등도 포함.)

(2) 고유한 의미의 헌법

-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
- 국가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존재함. (국가의 근본 조직법)
- 그 권한과 상호 관계 및 국가와 국민 관계에 대한 원칙

(3) 근대 입헌주의 헌법

-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
- 성문의 형식으로 명시하기 시작함.
-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
- 국민 주권, 기본권,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함.
- 형식적 평등과 재산권의 절대성 강조
- 인간 존엄성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함.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분립을 강조함. (2021수완)

(4) 현대 복지 국가 헌법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
-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시초
- 실질적 평등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
- 인간 존엄성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함.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분립을 강조함. (2021수완)

※ (2)~(4)로 오면서 확장·계승된 것임.

7.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 주의

-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음.
- 국민 주권 주의 실현 방안
 -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복수 정당제
 -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2) 자유 민주주의

-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 통치
- 자유 민주주의 실현 방안
 -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 의회 제도
 - ‘복수 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정당 활동 보장
 - ‘자유 재산제’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 사법권의 독립

(3) 복지 국가의 원리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리.
-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함.
-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
-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부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 실시
 -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

(4) 국제 평화주의

- 국제 질서를 존중,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
- 국제 평화주의 실현 방안
 - 침략 전쟁 부인(모든 전쟁 부인 X)
 -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국제 법규 →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 보장

(5) 문화 국가의 원리

-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 보장
- 국가가 문화를 보호·지원한다는 원리
-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 평생 교육 진흥
 - 무상 의무 교육 시행

(6) 평화 통일 지향

-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
-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헌법의 기본 원리
-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
 -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 대통령 평화 통일을 위한 의무

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
 -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 2) 행복 추구권
 -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 본질적 권리
-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 받지 않을 권리
- 상대적·비례적 평등(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인정)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됨.)

(3) 자유권

- 소극적·방어적 권리
-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음.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됨.)

(4) 참정권

- 능동적·적극적 권리
- 정치적 권리
- 국민 주권 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권리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5) 사회권

- 적극적 권리(국가에의 자유)
- 열거적 권리, 현대적 권리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실질적 평등
-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됨.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6) 청구권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수단적 권리, 적극적 권리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7) 기본권의 제한

- ① 목적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 ② 형식 :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함.
- ③ 방법 : 과잉 금지의 원칙
 - 1) 목적의 정당성
 - 2) 수단의 적절성
 - 3) 피해의 최소성
 - 4) 법익의 균형성(침해되는 사익 ≤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익)
- ④ 한계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9. 의원 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1) 의원 내각제의 특징

-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
- 총리와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함.
- 행정부의 이원화(국가원수 ≠ 행정부 수반)
- 의회 의원과 내각 모두 법률안 제출권 가짐.
- (의회 : 내각 불신임권, 내각 : 의회 해산권)을 행사

(2) 장점

-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
 -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 내각,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함.
- 내각 불신임 또는 의회 해산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 가능

(3) 단점

- 의회 다수당이 과반의석 차지
 - 다수당의 횡포 견제하기 어려움.
-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 구성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

10.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

(1) 대통령제의 특징

- 의회 의원과 대통령 각각 선출함.
- 엄격한 권력 분립 추구
- 행정부 :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됨.
-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음.
- 행정부의 일원화(국가원수 = 행정부 수반)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가짐(의회 견제)
- 행정부 법률안 제출 불가함.
- 각종 동의 및 승인권
-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행사

(2) 장점

-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됨
 - 국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음.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음.

(3) 단점

-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음.
-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독재 정치 출현 우려
 - 국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음.
-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려움.

1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1) 대통령제 요소

-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명확히 구분됨.
-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국회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
- 국회의 탄핵 소추권

(2) 의원 내각제 요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 국무회의의 존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존재)
-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할 수 있음.
- 국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12. 국회 (입법부)

(1) 국회의 지위와 구성

- 국민의 대표 기관, 국정 통제 기관, 입법 기관
-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됨. (임기 4년)
- 정기회 : 매년 1회 개최
- 임시회 : 대통령 or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2)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 국회의원 10인 이상 or 위원회 법률안 발의 or 정부의 법률안 제출
 - 2)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3-1)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 법률의 효력 발생
 - 3-2) 15일 이내 법률안 거부권 행사
 - 4)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5) 5일 이내 공포

※ 과반수는 절반이 아닌 '절반 초과'를 뜻함.

- 헌법 개정

- 1)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or 대통령의 발의
- 2)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3) 국민투표
 -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 4) 대통령 즉시 공포

(3) 재정에 관한 권한

-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로만 과세 가능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확정
- 예산의 결산 심사 권한(≠결산 검사(감사원))

- (4)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 국정 감사권('정기적'으로 국정 전반 감사)
 - 국정 조사권(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일시적')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 탄핵 소추권(탄핵 소추 의결권) → 탄핵 심판 청구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 (5)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불가능 (=임기))
 - 면책 특권 (국회 내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X)

13.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① 행정부 수반

- 공무원 임면권
- 대통령령 발함.
- 국무 회의 주재 (국무 회의의 의장)
- 법률안 거부권

② 국가 원수

-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
- 선전포고나 강화, 계엄 선포권
-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권한
-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 헌법 기관을 구성할 권한
 -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2) 행정부의 주요 조직

1) 국무총리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좌, 대통령 권한 대행
- 국무회의 부의장
- 행정 각부 통할
- 총리령 발함.
-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 행사 가능.

2) 국무 회의

-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
-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
- 대통령은 국무 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음.

3) 감사원

- 행정부 내 최고 감사 기관
- 대통령 직속 기관 (but, 독립된 지위 가짐)
- 국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결산 심사)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14.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

(1) 법원의 위상과 조직

-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됨.
- 대법원 :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됨.
- 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 (2021수완)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대법원 :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 소송
- 위헌·위법 명령 및 규칙·처분에 대한 심사권

(2) 공정한 재판의 실현

- 심급 제도



- 법원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 불복 : 항고, 재항고

(3) 헌법재판소

- 대통령이 9인 '임명'
 - 국회 3인 선출, 대통령 3인 지명, 대법원장 3인 지명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소의 재판

종류	청구권자	인용 결정 요건
위헌 법률 심판	법원	위헌 결정 : 6인 이상
헌법 소원 심판	국민	인용 : 6인 이상
탄핵 심판	국회	결정 : 6인 이상
권한 쟁의 심판	기관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정당 해산 심판	정부	결정 : 6인 이상

-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 소송 당사자의 신청 or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 제청

- 헌법 소원 심판 :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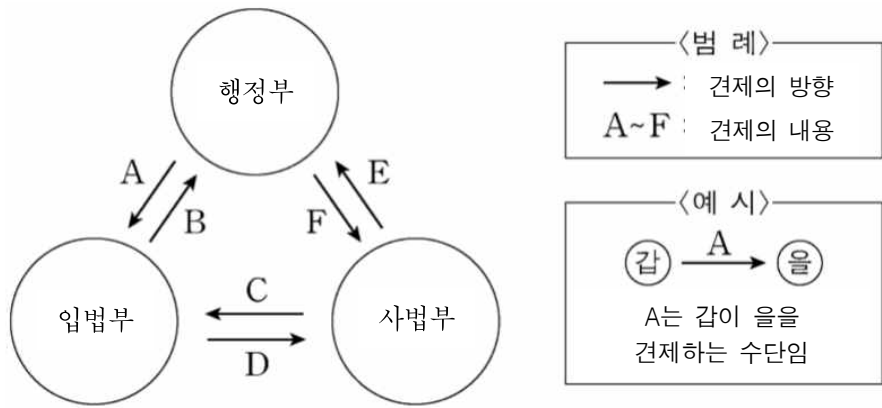
- ①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 공권력의 행사 or 불행사
- ②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각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4) 재판의 종류

- ① 민사 재판 : 원고, 피고
- ② 형사 재판 : 피고인, 검사
- ③ 행정 재판 : 원고, 피고 : 해당 행정 기관
- ④ 선거 재판 : 선고 무효와 당선 무효를 다루는 선거 소송 재판
 - 단심제 :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 비례대표 의원
 - 2심제 : 지방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범죄는 형사 재판으로 진행됨.

15. 국가 기관 간 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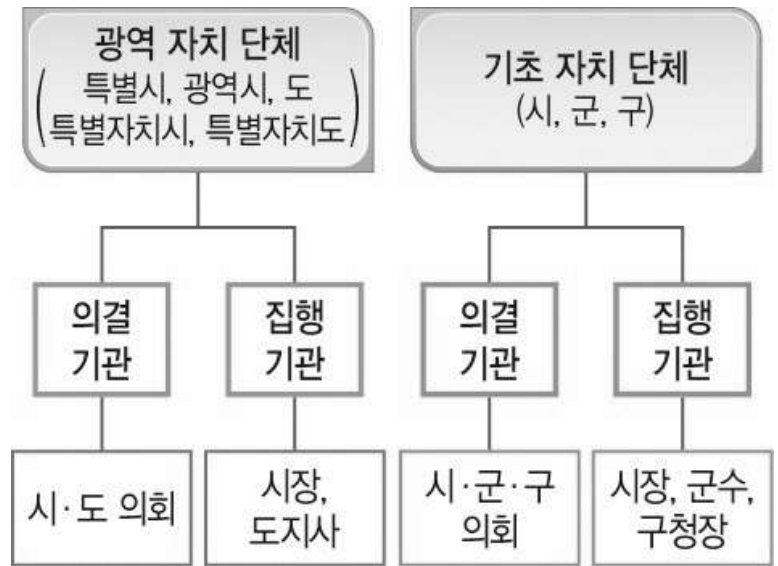


- ① A
 - 법률안 거부권
- ② B
 - 탄핵 소추권
 - 국정 감사, 국정 조사권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 동의·승인권
- ③ C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 ④ D
 - 탄핵 소추권
 - 국정 감사, 국정 조사권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X)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동의권
- ⑤ E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심사
- ⑥ F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16. 지방 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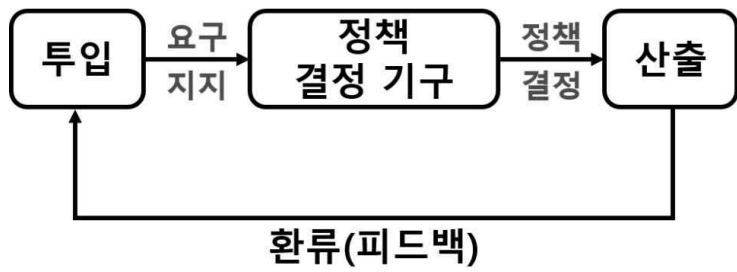
- (1) 지방 자치의 의의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권력 분립 원리의 실현
 -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수직적' 권력 분립
 - 지방 의회 - 지방 자치단체 : '수평적' 권력 분립 (같은 급)

(2)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 ① 지방 의회 : 임기 4년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 ② 지방 자치 단체장 : 임기 4년
 - 규칙의 제정(조례의 범위 내에서 가능)
 - 지방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 공무원 임면 및 감독권
 - * 지방 자치 단체장은 '기관'이다.
- (3)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견제
 - ① 주민 투표제
 -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정책 등을 주민 투표로 결정
 - ② 주민 소환제
 - 주민 소환의 요건
 -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직무가 태만한 경우
 - 어떻게?
 - 지방 자치 단체장 or 지방 의회 의원
 -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 투표, 그 중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 * 지역 보완하기 :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에서 제외

17. 정치 과정과 시민의 정치 참여



(1) 정치 과정

- 정책 결정 기구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 *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님 (정당≠입법부)
- '정당'은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음.
- 투입이 산출에 반영 잘 될수록 정치적 효능감 ↑

(2) 시민의 정치 참여



△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삽화

18. 선거와 선거 제도

(1)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① 보통 선거 : 일정 연령 이상 국민은 누구나
- ② 평등 선거 : 모두에게 동등한 표 가치 부여
- ③ 직접 선거 : 내가 직접 투표해야 함.
- ④ 비밀 선거 :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게 함.

(2) 선거 제도 (상대적인 특징)

① 선거구제에 따른 구분

1) 소선거구제

- 후보자 파악, 선거 관리 용이
-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 큼 → 정국 안정에 유리함.
- 사표의 과다 발생 가능성
-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 심화 가능성
- 정치적 책임 소재 파악이 쉬움.

2) 중·대선거구제

- 소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함.
-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큼. → 다양한 의사 반영
- 후보자 파악 어려움.
-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 → 정국의 불안정 요소
- 선거 과열 ↓, 선거 관리 어려움
-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가치의 차등 문제

② 대표 결정 방식에 따른 구분

1) 상대 다수 대표제

-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
- 당선자 결정 방식이 쉽고 간편함.
- 당선자의 대표성 ↓

2) 절대 다수 대표제

- 유효 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해야 하는 방식.
-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음.
- 선거 운영의 복잡, 선거 비용 ↑

+ 절대 다수 대표제의 대표적 예시

1. 결선 투표제

- 1차 투표에서 유효 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후보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선거 방식

2. 선호 투표제

-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투표 결과 1순위 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순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자를 1순위로 배한 표를 2순위로 배한 후보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3)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

대통령		- 5년마다 선출 - 중임 불가
국회의원	지역구	- 4년마다 선출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 4년마다 선출 -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지방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 4년마다 선출 - 3회에 한해 연임 가능
	광역 의회 의원	- 지역구 :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 정당 명부식 비례
	기초 의회 의원	- 지역구 : 중선거구제 - 비례대표 : 정당 명부식 비례
	교육감	- 정당 공천 X - 3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각 선거구의 유권자 1인당 투표의 가치 : 인구 ↓ → 투표 가치 ↑

+ 비례대표의 선거는 1개의 선거구로 인정함.

→ 우리나라의 선거구 개수는 253(소선거구)+1(비례)

+ 사표는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의미함.

+ 봉쇄조항 : 정당 득표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비례대표 배분

19.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1) 정당

① 정당의 특징

- 정치적 충원 기능(공천을 통해)
-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
- 정치 사회화 기능
- 정부와 의회를 매개
- 정부 정책을 비판 및 감시
- 국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② 정당제도의 유형

1) 일당제

- 독재 정치의 출현 우려
-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어려움.
- 사표의 과다 발생 가능성

2) 양당제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함.
- 정국이 비교적 안정됨.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음.
- 과반 의석 정당의 횡포 우려

3) 다당제

-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음.
-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비교적 쉬움.
- 과반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 ↓ → 강력한 정책 추진 어려움.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2) 이익 집단

- 특수 이익의 실현을 목표 (사회 보편적 이익과 충돌 우려)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
- 지역 대표제나 기존 정당의 부족한 점 보완
- 정치 사회화
-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비판하고 감시
- 여론의 형성,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3) 시민 단체

-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
- 정부 정책을 감시 및 비판
-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또는 해결책 제시
- 정치 사회화
- 사회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 여론 형성
-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20. 민법의 기본 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① 계약 자유의 원칙

-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의 강요나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
- 이 외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자유를 모두 포괄

② 과실 책임의 원칙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 X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 소유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
-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보완

① 계약 공정의 원칙

- 다음 두 가지의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 계약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②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고의 or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의 환경 침해 or 제조물 책임 or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함.
- 개인의 소유권도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강조한다. (2021수완)

※ 대체된 것 X (∵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도 인정됨.)

21. 계약의 이해

- (1) 계약 성립의 요건 : 청약과 승낙의 합치되는 시점 (계약서 필수 X)
-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취소와 무효의 경우

무효	취소
- 의사 능력이 없는 자와의 계약	- 행위 능력이 없는 자와의 계약 -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 등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과 계약 해제
 -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2) 미성년자와의 계약

- ① 미성년자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경우
-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 등)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 관련 행위
 -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한 경우

②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	판매자 : 계약 취소 불가 구매자 : 계약 취소 가능 법정 대리인 : 계약 취소 가능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른 경우	판매자 1) <u>법정 대리인에게</u> <u>확답</u> 요구 2) <u>철회권</u> 행사 구매자, 법정 대리인 : 계약 취소 가능

- ③ 미성년자가 판매자를 속인 경우
- 구매자 및 법정 대리인 : 취소권 배제됨.
 - 판매자 : 사기를 이유로 의사 표시 취소 가능 (단,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2021수완)

(3) 불법행위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 성립요건

- 1) 가해 행위
- 2) 고의 또는 과실
- 3) 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법과 동일함.
- 4) 손해의 발생 :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 5) 인과 관계
- 6) 책임 능력 :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는 능력

+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차이

1. 채무 불이행 : 채권 관계를 전제로 하여 문제 삼음.
 2. 불법행위 :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책임을 문제 삼음.
- + 갑과 을이 손해 배상에 합의하더라도 을은 갑은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다. (2021수완)
- + 법원은 갑에게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021수완)

(4) 특수 불법행위

- 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책임 무능력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짐.
 -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② 사용자의 배상 책임
 - 사용자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종업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③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짐.
- ④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호와 권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⑤ 공동 불법 행위 책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행한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가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연대책임을 짐. (방관자 포함)

(5) 손해배상

-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함. (위자료 포함.)

+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손해 배상 책임

- 책임 능력이 X 미성년자의 부모 : 특수 불법 행위 책임
- 책임 능력이 O 미성년자의 부모 : 일반 불법 행위 책임

22. 가족관계

(1) 혼인의 성립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여야 함. (18세 이상)
- 민법에서 제한하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함. (강압 또는 속임수는 취소 사유)

② 실질적 요건

- 혼인 신고를 해야 함. (혼인신고 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임.)

(2) 혼인의 효력

-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됨.
- 동거와 부양의 의무
- 부부 별산제
- 일상 가사 대리권

(3) 이혼

① 협의 이혼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짐. (제한 사유 X)
-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 시 효력이 발생함.
- 이혼 숙려제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재산 분할 청구권
- 양육 맡지 않는 부모는 '면접 교섭권' 가짐.

② 재판상 이혼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됨.
- 가정 법원의 판결 확정 시 효력이 발생함. (이혼신고 필요X)
- 재산 분할 청구권
-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 양육 맡지 않는 부모는 '면접 교섭권' 가짐.

(3)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① 친자 관계

친양자	- 혈연관계의 자녀 -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된 자녀와 인지되지 않은 자녀가 있음.
양자	-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일반 입양은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 친족 관계에게도 상속받을 수 있음.

- 친양자 제도

-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됨.
- 가정 법원의 청구해야 함.

② 친권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이 상실될 수 있음.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사라짐.

(4) 유언과 상속

① 유언

- 17세 이상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음.
- 사망 전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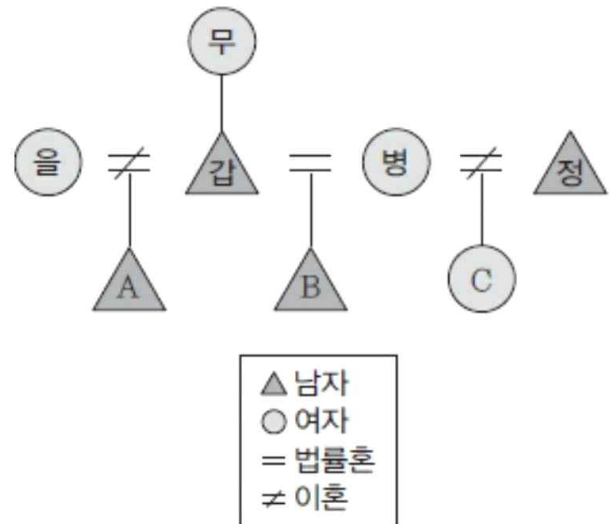
② 상속

- 상속인의 순위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배우자 50% 가산)
 2. 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 50% 가산)
 3. 배우자
 4. 형제자매
 5. 4촌 이내 방계 혈족

→ 유류분 제도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 개념 덧붙이기



해당 사항에서 갑과 병이 각각 을, 정과 이혼하고, 갑-병이 재혼했을 때, 갑이 C를 입양해야지만 C가 갑의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2021수완)

23. 죄형 법정주의

(1)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의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로 결정되어야 한다.
→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할 수 없다.
→ 단, 가해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 적용한다.
- ③ 명확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④ 적정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유추 해석이 허용되기도 함.

(2)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천

- ① 근대적 의미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범죄의 구성요건, 처벌 등이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 ② 현대적 의미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 아니라 법률의 적정성도 판단
→ 법관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24. 범죄와 형벌

(1) 범죄의 성립 요건

- ① 구성 요건 해당성
→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인가?
- ② 위법성
→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가?
→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
 2.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or 업무로 인한 행위)
 3.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4. 자구 행위 (청구권의 실행 불능을 피하기 위한 행위)
 5.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 ③ 책임
→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책임 조각 사유	-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 심신 상질자의 행위 - 강요된 행위
책임 감경 사유	- 심신 미약자 - 청각과 발음 기능 모두 장애가 있는 자

(2) 형벌

생명형	- 사형
자유형	- 징역 : 1개월 이상 수감, 정역 부과 O - 금고 : 1개월 이상 수감, 정역 부과 X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 정역 부과 X
명예형	- 자격 상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박탈함. - 자격 정지 : 일정 기간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
재산형	- 벌금 :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의 금액 부과 - 과료 :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 부과 (≠과태료) - 몰수 : 범죄 행위에 이용했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함.

+ 7월 모의고사

(3) 보안처분 : 대안적 제재 수단

- ① 치료 감호
→ 치료 감호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
- ② 보호 관찰
→ 사회생활 영위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 받게 함.
- ③ 수강 명령
→ 범죄성 개선을 위한 진단, 상담, 교육을 받도록 명령함.
- ④ 사회봉사 명령
- 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 정보 관리

※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 가능

※ 형벌과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보호 처분 X)

25. 형사 절차

- (1) 수사 개시의 이유
 → 고소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 고발 (제 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
 → 자수
 → 현행범 체포
- (2) 불기소 처분의 이유
 ① 기소 유예
 →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안하는 것
 ② 공소권 없음
 → 피의자의 사망 등
 ③ 혐의 없음
 → 증거가 없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죄가 안 됨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or 책임 조각인 경우
- (3) 기소가 된다면?
 →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 검사와 가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됨. (피해자는 당사자 X)
 → 피의자 → 피고인
 → 재판이 시작됨
 → 현행범 체포
- (4) 재판 진행 중
 → 입증 책임 : 검사에게 있음.
 →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함.
- (5) 선고
 ① 무죄 선고
 →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② 유죄 선고
 → 실형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 집행유예 : 유예 기간 죄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선고유예 : 유예 기간 죄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 (6) 형의 집행과 상소
 → 유죄 확정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감.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재판에 대해 상소할 수 있음.
 → 재판이 시작됨
 → 현행범 체포
- (7) 국민 참여 재판
 → 지방 법원 합의부(1심, 형사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함.
 →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을 구속하지 않음.
 →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짐.
 → 배심원의 조건 : 20세 이상 일반 국민 (직업 제한 있음.)

26.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 (1)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유죄 확정 전까지)
 → 적법 절차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원칙상 불구속 수사·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 변호인 제도
 → 진술 거부권
- (2)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① 영장 제도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구속·압수·수색 가능함.
 →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의 경우 사후 영장 발부가 필요함.
 ② 구속 영장 실질 제도
 → 검사가 구속 영장 신청 시 판사가 발부를 할지에 대한 판단
 →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 보장을 위함.
 ③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수사 과정에서 구속 이후 석방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
 ④ 보석 제도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하는 것. (재판 과정에서만)
- (3)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 제도
 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재산상 피해는 해당 안 됨.
 ② 배상 명령 제도
 →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인정됨.
 ③ 형사 보상 청구 제도
 → 구속된 사람 중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④ 명예 회복 제도
 → 무죄 판결 당사자가 청구하면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함.

27. 소년 사건

(1) 소년 사건에서의 소년의 분류

- ① 우범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 ② 촉범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 ③ 범죄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2) 소년 사건에 대한 처리

- ① 경찰의 사건 처리
→ 촉범 소년, 우범 소년 :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
→ 범죄 소년 : 검사에게 사건을 보냄.
- ② 검사의 사건 처리
→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
→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 일반 법원으로 송치 (기소)
- ③ 가정 법원 소년부의 사건 처리
→ 우범 소년, 촉범 소년, 범죄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부과
- ④ 형사 법원의 사건 처리
→ 형사 재판 진행
→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

(3) 재판의 결과는?

-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
- 보호 처분과 형벌은 동시에 부과되지 않음.

28. 노동법

(1) 근로 계약

-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함.
-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지급
-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
-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
- 1주 12시간 이내 근로 연장 가능
- 휴게시간 지급 (4시간 : 30분 이상, 8시간 : 1시간 이상)
-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2) 청소년의 근로 계약

- 일주일에 35시간, 하루에 7시간
-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 근로 가능
- 휴게시간 지급 (4시간 : 30분 이상, 8시간 : 1시간 이상)
-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대리X)
- 미성년 근로자는 본인이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15세 미만인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할 수 없음.
-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부모의 동의서'를 사업자에 갖추어야 함.

(3) 근로 3권

- ① 단결권
→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②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님.
- ③ 단체 행동권
→ 쟁의 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정치 활동 or 경영 관여 목적의 단체 행동은 X
→ 사용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이후 직장 폐쇄 가능함.

(4)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 ① 부당해고 :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불가피할 시 1달 임금 지급)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가능함.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당사자만 가능
- ② 부당 노동 행위 :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당사자와 노동조합 모두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가능함.
- ③ 노동 위원회와 행정 소송
→ 당사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지방 노동 위원회 심판에 대한 재심 신청 (회사 or 당사자)
→ 중앙 노동 위원회 심판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장을 대상으로 행정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29. 국제 사회

(1)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구분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사상적 배경	홉스의 인간관	계몽주의
평화 보장 방안	힘의 우위 확보 세력 균형 전략	국제법, 국제기구의 중요성 집단 안보 체제
한계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함.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설명함.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간과함.

(2)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 ①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 국가의 일반화
 -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됨.
- ② 제국주의 시대
 - 산업 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 자국 이익을 위해 식민지 건설
 - 유럽 중심의 국제 사회가 전 세계로 확대
- ③ 제 1, 2차 세계 대전과 평화 유지 노력
 - 1)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로 인한 1차 세계 대전 발발
 - 2) 국가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맹 설립
 - 3) 전체주의 국가에 의한 2차 세계 대전 발발
 - 4) 강대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 설립
- ④ 냉전 체제와 탈 냉전시대
 - 1)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
 - 2) 양극 체제와 냉전 체제의 형성
 - 3) 제 3 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공산주의 진영의 다원화
 - 4) 다극 체제로의 전환, 냉전 체제 완화
 - 5) 몰타 선언(탈냉전의 계기)과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
 - 6) 냉전 체제의 종식, 탈냉전 시대 개막

30. 국제법의 법원

(1) 국제법의 법원의 종류

- ① 조약
 -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
 -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님.
 - 국가와 국제기구와도 체결 가능.
- ② 국제 관습법 (ex. 국내 불간섭 원칙)
 -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의무로 인정된 것
 -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 ③ 법의 일반 원칙 (ex. 신의 성실의 원칙)
 - 문명국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일반적인 원칙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 ④ 판례 or 국제법 학자의 학설

(2) 국제법의 특징과 한계

- ①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움.
- ②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을 법률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함.

31. 국제 기구

(1) 국제 연합(UN)

- ① 총회
 -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
 - 권고적 효력을 가져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함.
- ②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
 -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결정
 -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됨.
 -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15개 국가 중 9개국의 동의 필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시 안전이 부결됨.)

(2) 국제 사법 재판소

- 서로 다른 국적의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재판관은 국제 연합의 총회 및 안보리에서 선출됨.
- 강제적 관할권이 없음. (당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재판 가능)
- 재판 당사국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없음.
-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져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함.

※ 유의 사항

해당 자료에 관한 저작권은 윤준수에게 있으며, 변형 없는 배포는 가능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시 법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